

| 위원회 동정_ 해운산업위원회 |

해운산업 재건 위한 제도개선 및 고용 연계 방안 모색

손영우 전문위원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18.11.23. 발족한 해운산업위원회는 '19.1.15.에 제3차 전체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제1차 회의(11.23.)에서 '해운재건 5개년 계획과 좋은 일자리의 연계 방안'을 해운산업위원회 주요 의제로 선정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제2차 회의(12.10.)에선 준비위 시기 논의된 바 있던 '국가필수해운제도와 일자리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국가필수해운제도 관련 법안(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유지에 관한 법률)이 '18.12.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선원의 인력충원과 양성계획'을 중심으로 본 법률의 시행령 포함 건의 사항을 노·사·정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제3차 회의부터 '선박확보와 고용 연계 방안' 의제를 가지고 2~3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제3차 회의에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선박확보 정책에 대해 공유하였다.

해당 의제에 대해 해양수산개발원의 황진희 위원은 “해운산업은 ‘고용 없는 성장’의 대표적 산업으로 국제적 경쟁에 직면하여 일부 선주들은 선원의 인건비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구하



고 있다며, 이와 같은 저임금 추구 경향이 안전사고와 선박 사고 등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선원 인력은 선박 운항에 필수적인 인적자원이며 선박 안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해운기업의 고용 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지난 제5차 회의(19.2.8.)에서 해당 의제에 대해 선원노련은 정부지원 정책금융에 따른 신규선박의 경우, 해당 선원에 대해 전원 정규직 선원으로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요구했으며, 선주협회에서는 이와 같은 요구는 신규 선박에 대해 적취율 향상 보장과 이에 대한 화주의 동참이 있을 때 현실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향후 ‘선박확보와 고용 연계 방안’ 의제에 이어 3, 4월에는 ‘화물확보와 고용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또 다른 축으로 ‘선원의 인력충원과 양성계획’을 중심으로 국가 필수해운제도 관련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세칙에 포함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발족취자: 해운산업의 새로운 국제 질서재편에 따른 ‘공생적 산업생태계’ 구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한 노사정의 공동 방안 수립을 위해 '18.11.23. 발족